

“국토 대청소 5개년 프로젝트”

□ 정책공약

전국의 해안, 강, 하천, 저수지, 군사지역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깨끗하게 대청소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“국토 대청소 5개년 프로젝트”를 추진하겠습니다.

□ 정책의 필요성

- 전국의 강, 호수, 저수지, 댐, 연안, 계곡, 군사지역 등에 방치된 쓰레기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음. 환경부, 건교부, 농림부,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및 정책 부족으로 사업이 형식적이거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.
- 도시 어린이의 20%가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지속가능성 지수(sustainability index)는 세계 142개국 중 최하위권인 122위와 136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음(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05).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, 우리나라는 인간과 생물의 서식이 불가능할 지경이 되고 말 것임.
-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의 정책개발이 요구됨.
- 그 첫 단계로 전국의 하천과 호수, 저수지, 연안 바다, 산과 들, 군사지역 등의 쓰레기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대청소하고 선진국형 폐기물 수거·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“국토 대청소 5개년 프로젝트”를 추진하겠음.

□ 추진방안

- 5년 내에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하겠음.
- 방치쓰레기를 수거·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음.
- 미수거 및 방치된 쓰레기 수거·처리에 연간 6~10만 명의 인력을 참여시켜 고용확대를 이루어 나가겠음.
- 방치되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쓰레기 수거·처리 체계와 선진국형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을 지원하겠음.
- 해안, 강, 하천, 군사지역 등의 방치쓰레기를 처리하고, 동시에 수변구역에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겠음.
- 중앙정부, 지자체, 시민사회단체,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와 선진국 수준의 지속가능 발전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음.

□ 추진방법 및 예산

-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대청소 프로젝트는 그 추진본부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행정자치부, 농림부, 해양수산부, 건설교통부,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참여시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민사회,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정책과 함께 국민대운동 차원에서 실시할 것임.

- 기존 법규의 정비와 법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수립
- 적법, 적정한 절차 없이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없음. 광범위한 실태조사 실시 후 예산 수립 및 재원 조달 방법을 수립. (3~5조원 추정)

□ 기대효과

-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확보
 - 프로젝트를 통하여 환경보전 + 경제성장 + 사회통합을 구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를 물려줌
 - 환경의 질 개선
 - 하천과 강 호소의 수질과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
 - 연안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족자원의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
 - 방치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2차, 3차 환경오염을 예방
 - 환경성 질환의 원천적 근원의 제거
 - 고용창출효과
 - 연간 6~10만 명의 청년과 실직자를 이 프로젝트에 참여케 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실직자 구제 등 고용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.
 - 아름다운 수변공간(waterfront) 창출
 -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 가능
 - 아름다운 산과 수변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
- <첨부> 방치쓰레기 실태 및 문제점

	쓰레기 종류 / 문제점
강, 하천	-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, 초목류, 불법매출 쓰레기 등 - 상수원 오염, 수질오염, 하천생태계 교란, 경관 훼손, 수해 유발 등 - 강, 하천, 호수의 바닥에 방치된 쓰레기의 경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, 하상청소를 위한 장비와 체제 미비
호수, 저수지, 댐	- 호수 및 저수지 17,000여개 중 13,700개를 지자체에서 관리 -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은 대부분 처리되고 있음 -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댐의 쓰레기 실태는 명확히 파악 안 됨
해양 및 연안	- 매년 10만톤 가량 발생, 80%는 강, 하천에서 유입, 20%는 어업, 낚시, 배 등 해상에서 발생 - 수산 및 생물자원 손실, 생태계 훼손, 해양안전 위협, 해양환경 오염 등의 문제 발생 - 해양 쓰레기의 20% 정도만 수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- 침전 해양쓰레기 40만 톤으로 추정
농촌	- 폐비닐, 폐농약병, 폐 영농기계, 생활폐기물, 건설폐기물 - 토양오염,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 -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시, 군에서 수거 처리하나 많은 문제점 있음. - 폐비닐 불법 매립 혹은 소각 - 수거 인력 부족
산, 계곡, 들판	-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된 각종 폐기물, 철거된 폐건물, 위락시설 등 - 방치 쓰레기 처리 시스템 미흡, - 국토대청결운동은 형식적인 이벤트성 행사로 그치고 있음
사업장 및 생활권주변	- 사업장 폐기물, 건축폐기물, 폐타이어, 폐비닐 등 - 환경부 : 사업장 폐기물, 산자부, 폐광산, 건교부; 방치건축물, - 산림청 : 채석장 등을 담당하여 2005년 말까지 사업장 방치폐기물의 87% 처리했음.
전반적 실태 및 문제점	-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음 -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. - 환경부, 건교부, 행자부, 해양수산부, 농림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간, 관련 중앙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며, 책임과 비용의 분담문제가 발생 - 방치된 쓰레기를 지자체와 개별 부처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